

서대문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가 이달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서대문청년창업센터(서대문구 수색로43)에서 '2026년 서대문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대문구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대문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한다.

구는 대표적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인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 입주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과 유망 유니콘 창업기업 육성 분야에서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 등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제2회 서울클라보레이션 글로벌 청년창업 창업스쿨' 등 청년창업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웹스톱 상담을 실시한다.

설명회와 함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 분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담당자와 함께 하는 '일대일 맞춤 상담'도 진행된다.

관내 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창업센터(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선착순 교부할 예정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구 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인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융자·보증), 창업, 기술개발,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작구, '시니어 활력 운동교실' 운영 개시... 어르신 건강 지킨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시니어 활력 운동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노년기 근력 저하를 예방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총 17일(화)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동작구청 옛정사(장승배기로 161)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A반(오전 9시 반)과 B반(오전 10시

반)으로 나눠 각 1시간씩 운영되며, 동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전하게 운동을 지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운동 경험이 적은 어르신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도구를 활용한 중강도 근력운동과 실내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대상으로 반별 3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늘(23일)부터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작구청 옛정사 1층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체육회(☎02-832-02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동작구체육회와 협력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총 104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2,085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운동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시설 아동, 서울 상위권 대학 3곳 합격...10년 지원 결실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시설에서 생활해 온 보호대상아동이 강남구와 아동복지시설의 단계별 지원 속에 서울 소재 주요 대학 3곳에 동시 합격하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정서 안정에 집중했던 초기 보호부터 학업 지원, 자립 준비까지 10여 년간 민·관이 이어온 통합 지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병)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A 학생(18)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

요 대학 3곳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시설은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계획을 세우고 정서 안정에 집중했다.

시설은 전문 치료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했고, 강남구는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보호 과정에서의 공백이 없는지 살피며 시설과 함께 보호 방향을 제시했다. A 학생은 점차 생활 리듬을 되찾고 시설과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학업 목표가 구체화된 뒤 지원은 학

습 중심으로 전환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5등급 성적에서 맴돌았던 A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턴 상위권 대학으로 진로 목표를 세우며 학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설은 외부 후원을 연계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독서실 이용과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2 9월 수학 성적이 5~6등급에서 3~4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성적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150개 가맹본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통해 가맹사업 위약금 기본 원칙·산정 방식 등 제시... 전국 최초

실제 손해 기준 위약금 산정해 고정 금액 중심 관행 개선... 6가지 발생유형별 위약금 산정식 마련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영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영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금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인력·설비 투여 등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자점매입(본부 수익 상실분과 점주 부담의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영업비밀 보호 및 경영금지 위반(고정 금액 대신 손해 측정 기준 구체화) △계약 기간 중 해지(잔여 기간에 비례한 합리적 한도 설정) △종료 후 철거 의무 위반(일당 부과 금액의 적정성 검토) △영업지위변 및 시설부담금(감가상각 및 실제 지원액 반영) 등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히 횡수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자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필수 구매 품목 지정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해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까지 개선하게 됐다. 올해는 가맹점 영업 지역 설정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 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된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경기공유학교

지금 모집중

우리 동네 경기공유학교 이게 되네?!

◆ 대상: 초3~고3 학생 및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진로,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디지털 등

◆ 방법: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3월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수상레저스포츠

오케스트라

도예/글프

영화/영상

체육

승마/드론

반도체

경전철 타고~

체험

전통예술

스크린 미디어

택시 타고~

클로컬 언어

수리 융합과학

지역 자원 공유

커피전문점 다소비 메뉴 129건의 당류·카페인 조사

고카페인 음료 비율 64%, 일부 음료·디저트 조합 섭취 시 당류·카페인 권고량 초과

슬기로운 카페 생활: 건강한 주문 가이드

오늘도 카페에 가는 당신을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 선택

[STEP 1] 음료 선택

원재료가 단순한 음료를 선택

▲ 프라임·블렌디드 음료를 선택하면? →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STEP 2] 카페인 선택

연하게 또는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

[STEP 3] 당류 선택

덜 달게 음료를 선택

▲ 달콤함을 더하려면? → 일반 시럽보다는 저당 시럽을 추가하세요!

[STEP 4] 디저트 선택

크기가 작은 디저트를 선택

▲ 크기가 큰 디저트는? → 여러 번 나누어 먹어요!

출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제외한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대상에 해당했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떼, 카페모카는 분석 대상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 음료에 해당했고, 녹차 및 홍차 함유 음료 또한 절반 이상 고카페인 음료였다.

이정성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컵스텝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융자지원

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 도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점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업소와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fsi.seoul.go.kr, 위생업소관리)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성 기자